

## II. IMF 경제 정보

### 1. 금주의 정책 이슈

#### □ 지급준비제도 폐지 논쟁

- (폐지론 제기) 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자 지급준비 제도를 폐지하여 통화 팽창과 경기진작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
  - 지급준비 현황
    - 지급준비율: 평균 2.9% 수준(요구불 예금 3%, 정기예금 1~2%)
    - 지급준비금: 4조 5,000~8,000억 원 규모
  - 지급준비율을 0으로 하는 경우(폐지하는 경우), 은행은 여유 자금을 가계나 기업에 대출하게 될 것이고 100조 원 이상의 신용 창출 효과를 볼 수 있음
  - 지급준비금이 없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은 은행들이 적정 수준의 당좌예금 잔액을 유지하도록 유도하여 해결
  - 멕시코의 경우 지급준비제도를 폐지한 후 -6.2%였던 성장률이 5.1%로 호전되는 등 외환위기를 겪은 많은 나라들이 지급준비제도를 폐지하여 성과를 보고 있음
- (폐지 반대론) 지급준비제도의 폐지는 신용경색을 해소와 개혁 정책에 도움이 안되며 외국인 투자를 저해할 수도 있음
  - 우리나라의 지급준비율은 다른 개도국들에 비해 선진국 수준만큼 낮은 것이어서 폐지되더라도 신용경색 해소 효과는 적을 것임
  - 현재의 신용경색은 자금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은행의 소극적인 대출 관행에 기인한 것이어서, 지급준비 폐지로 인한 여유 자금이 신용경색을 완화하는데에 큰 효과를 본다는 보장이 없음
  - 시중에 자금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부채비율 축소와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해이해질 것임
  - 지급준비 폐지로 금리가 크게 인하되면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줄어들고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이 많아져 또다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음
- (최근의 정부 입장) 완전한 폐지는 아니더라도 적정 수준으로 지급준비율을 인

하하여 신용경색에 따르는 금융경색 해소를 모색할 방침

- 정부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보이는 현 상황에서 지급준비율 인하를 불가피 한 것으로 보고 있음
- 반대 입장을 견지하던 한국은행에서도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적절한 수준으로 지급준비율을 인하할 수 있음을 시사
- 정부의 정책의도  
지급준비율 인하
  - 은행이 여유 자금으로 위험도가 낮은 국공채를 매입하도록 유도
  - 정부는 국공채 매각대금을 성업공사에 출자
  - 출자금으로 은행의 부실채권 매입
  -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상승
  -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이 확대되어 신용경색 해소

< 용어해설: 지급준비제도 >

-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 등 금전채무의 일정 비율(支給準備率)에 해당하는 금액(支給準備金)을 의무적으로 한국은행에 예치하거나 시재금으로 보유토록 하는 제도
- 원래 예금자보호를 위한 제도였으나 오늘날에는 재할인제도 및 공개시장조작과 함께 중앙은행의 정통적인 통화신용 정책수단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음
- 즉, 한국은행은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고 판단되면 금융 기관의 지급준비율을 높여 신용창조 능력을 줄임으로써 통화량을 줄이고, 그 반대의 경우에는 지급준비율을 낮추어 통화량을 늘리게 됨

(정 반 석 [bsjoun@hri.co.kr](mailto:bsjoun@hri.co.kr) ☎724-4045)